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1호

발행일: 2022. 1. 27. (목)

제392회 국회

(임시회, 2021. 12. 13. ~ 2022. 1. 11.)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산업경쟁력 강화
- 나. 노동이사제도
- 다. 혁신적 포용국가 - 문화 · 예술 및 교통 분야
- 라. 청년의 참정권 확대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392회 국회(임시회)는 2021년의 마지막 본회의(12월 31일)와 2022년의 첫 본회의(1월 11일) 등 30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2년 첫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 현행법상 만 18세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등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7)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의무를 명시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기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피의자 등의 당사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2021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활성화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체육진흥투표권 이른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발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도록 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임시회)의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79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의원 등 12인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0인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기획재정위원회(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15인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 등 13인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의원 등 13인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11	국방위원회(7)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4	행정안전위원회(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7	문화체육관광 위원회(2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8인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등 14인
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0인
2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1인
2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1인
22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1인
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4	문화체육관광 위원회(27)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
2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7인
2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2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등 10인
2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등 10인
2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0인
30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1인
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9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1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2인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등 10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등 50인	
48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4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5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53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 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5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55		보건복지위원회(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 인
56			자살예방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3인
57		국토교통위원회(2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5인
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등 10인	
5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10인	
6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6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6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등 12인	
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등 14인	
65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등 10인	
6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0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7	국토교통위원회(2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3인
6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등 17인
6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등 11인
7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6인
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7	정치개혁 특별위원회(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7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이사 제도, 혁신적 포용국가 - 문화 · 예술 및 교통 분야, 청년의 참정권 확대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산업경쟁력 강화

개요

정부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5G, 혁신성장, 에너지전환 정책, 소재 · 부품 · 장비(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은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

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R&D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변화가 엿보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첫 본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들 법률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육성,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마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입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p> <p>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p> <p>[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과 실행전략을 비롯하여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의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 사업을 정부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p>	2022-1-11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2022-1-11 (원안가결)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2-1-11 (수정가결)

정책 동향

K-반도체 전략(2021.5.13. 발표)

과제목표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주요 내용

(추진전략)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 “K-반도체 벨트” 조성,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 인프라 지원 확대, 인력·시장·기술 확보 ⇒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세부과제)

- [전략1] K-반도체 벨트 조성 : (제조)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소부장) 소부장 특화단지, (장비) 첨단장비 연합기지, (패키징) 패키징 플랫폼, (설계) 팹리스 밸리
- [전략2] 인프라 지원 확대 : (세제) R&D·시설투자세액 공제 강화, (금융)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규제) 주요 규제 합리화, (기반) 용수·전력 등 지원
- [전략3]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인력) 인력양성·관리 강화, (시장) 연대·협력 생태계, (기술) 차세대 분야 선점
- [전략4]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 (지원체계) 특별법 제정 추진, (車반도체) 수요-공급 연계, (기술안보) 국가핵심기술 확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대응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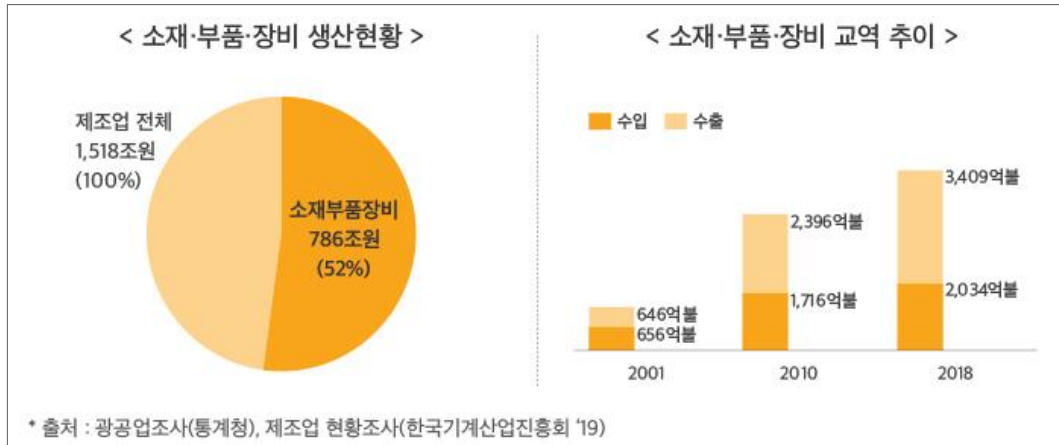
- ◇ 수출 : ('20) 992억 불 ⇒ ('30) 2,000억 불
- ◇ 생산 : ('19) 149조 원 ⇒ ('30) 320조 원
- ◇ 고용 : ('19) 18.2만 명 ⇒ ('30) 27만 명
- ◇ 투자 : ('20) 39.7조 원 ⇒ ('30) 510조 원+α (~'30누계)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 5. 13.)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과제목표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한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주요 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 8. 5. 관계부처 합동)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 8. 27. 과기정통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과 연계해 연구개발(R&D) 중심 근본적 해법 모색
□ 주요 내용으로 ① 핵심품목 진단과 연구개발(R&D) 대응전략, ② 핵심품목 집중 투자, ③ 연구개발(R&D) 전주기 장벽 해소, ④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총동원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19. 11. 14. 특허청)

①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②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③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④ 공정경제와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20. 1. 22. 산업부)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 ○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하고,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경쟁력위원회를 소부장 지휘본부로 운용, 부처간 협업체계를 고도화

2020년 '튼튼한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20. 2. 17. 산업부)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화, ○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협력 생태계 구축, ○ 국제 공급망 안정화

관련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참고 자료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11.
소병철 의원안, 유의동 의원안, 송영길 의원안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 3.

조승래 의원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 11.

양금희 의원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168호 2020. 10. 14.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5. 30.

한·일간 정치적 이슈에서 파생하는 무역마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 확산으로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따른 수출·입 쇼크는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소부장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 측면에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소부장 기업의 해외공급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감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다양한 측면의 세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규모별 보안관리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9. 4. 30.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더욱 증가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방안을 연구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 조직 규모, 기술규모 별 보안관리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국가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기술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경쟁 국가나 경쟁 기업에서는 앞서가는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물리적인 산업 스파이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핵심기술 불법 유출 및 스파이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기업 최고의 경쟁력인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자구노력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 산업기술 유출이란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유출 및 침해행위를 가리킴.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

나. 노동이사제도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도는 근로자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사회의 중립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도 도입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해당 공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2-1-11 (원안가결)

정책 동향

<p>[100대 국정과제]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p> <p>과제목표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p> <p>주요 내용 (노동존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p>	<p>[100대 국정과제]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p> <p>과제목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 확립 정보공개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 내실화</p> <p>주요 내용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인권·안전·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p>
---	--

[100대 국정과제]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100대 국정과제]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p>(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7년에 2대 지침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추진 <p>(ILO 핵심협약 비준) 강제노동 금지 분야 및 결사의 자유 분야 핵심협약 비준 추진</p> <p>(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p> <p>(체불·부당해고 구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20년),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 (~'22년)</p> <p>(청년 일자리 기본권) 학교 및 청소년, 근로자, 사업주 등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8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p>	<p>도록 공공기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17년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p>(열린 공공기관) '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도 신설</p> <p>(평가체계 개선) '17년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 '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p> <p>(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p> <p>(지방 공공기관 혁신) '17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 지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p>

참고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 2.

김주영 의원안, 김경협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공공기관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 강화 등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19. 12. 31.

□ 노동이사제 도입현황 : 노동이사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중임.

□ 노동이사제의 공공기관 확대 논의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으로 확대·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내부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와 노동자대표들은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과 논의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 8. 9.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근로자)가 기업 이사회에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동이사제라는 용어는 근로자이사제, 근로자대표이사제, 종업원이사제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주요국의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논의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체제구축 등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노동이사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 노동이사제 경험과 한국형 노동이사제 발전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세미나 2021. 11. 26.

[발제 1] 유럽 노동이사제 : 제도와 실제

제도적 측면 : 유럽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내 노동자 발언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내 노동자 발언권 관련 제도적 장치는 유럽 각국에 보편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유럽 사회적 모델의 특징. 노동이사제의 법적 체계는 국가별 권리의 현저한 차이에 기인한 다양성. 유럽 기업지배구조 내 노동자 발언권은 여러 형태의 기업지배구조 기구를 통해 실현되고, 유럽 전역에 보편적으로 보장되어 유럽 사회적 모델의 특징으로 간주되며, 매우 다양한 법적 제도에 기반하고 있음.

실제적 측면 : 제도적 차이가 반드시 관행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이사 활동 방식에 공통점이 존재. 노동이사제의 도입으로 기업 내 권한 균형의 재조정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님. 노동이사가 전략적 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필요.

[발제 2] 한국형 노동이사제 경험과 발전 방안

한국형 노동이사제 경험 : 현황과 쟁점

한국형 노동이사제 발전 방안

향후 쟁점과 미래과제

노동이사제 현황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20. 3. 10.

■ 노동포커스 : 서울시 노동이사제 실험, 성과와 과제 (이정희)

■ [특집] 노동이사제 현황과 쟁점 :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이상준/이정희), 노동이사제 조례의 쟁점과 개선 방향 (박귀천),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배경과 현황 (최흥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유럽의 노동이사제를 참조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7. 8. 5.

노동자들의 교육수준과 기대와 요구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조직의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인력의 능동적 활용을 위해서는 인력관리방식에 있어 기존의 ‘통제와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이해, 참여,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다양한 경영참여, 의사결정 참여, 개별적 참여만이 아닌 집단적 참여가 요구된다.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집단적 경영참여를 제도화해왔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주로 노동자들의 개별적 경영참여, 비공식적인 경영참여 등의 형태를 발전시켜 왔다.

다. 혁신적 포용국가 - 문화·예술 및 교통 분야

개요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포용국가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양적 성장에 주력해 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유사직종의 전문강사와 달리 고용 및 처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및 처우 개선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장애예술인은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추가하고, 또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의 관리주체이며 위탁사업의 형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을 명시하려는 것임.</p>	2021-12-31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원상회복·보수·철거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와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1-12-31 (원안가결)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p> <p>학교예술강사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유사직종인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강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달리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고용 및 처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2021-12-31 (수정가결)
4	국토교통위원회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들의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 제2조 제2호의 “교통수단”에 궤도·삭도를 포함시키고,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도(道)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상호협력하여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p>	2021-12-3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과제목표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예술인 권익 보장) '17년 공정성 협약 발표, '18
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18년 문예기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 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
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

(예술인복지 강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
으로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
험료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
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
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자원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자원 마련방안 강구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지원기
관 독립성 확보,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
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100대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과제목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생활 환경 조성

주요 내용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
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
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
수당 월 10만 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지급
- '18년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을 25만 원으로 인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신규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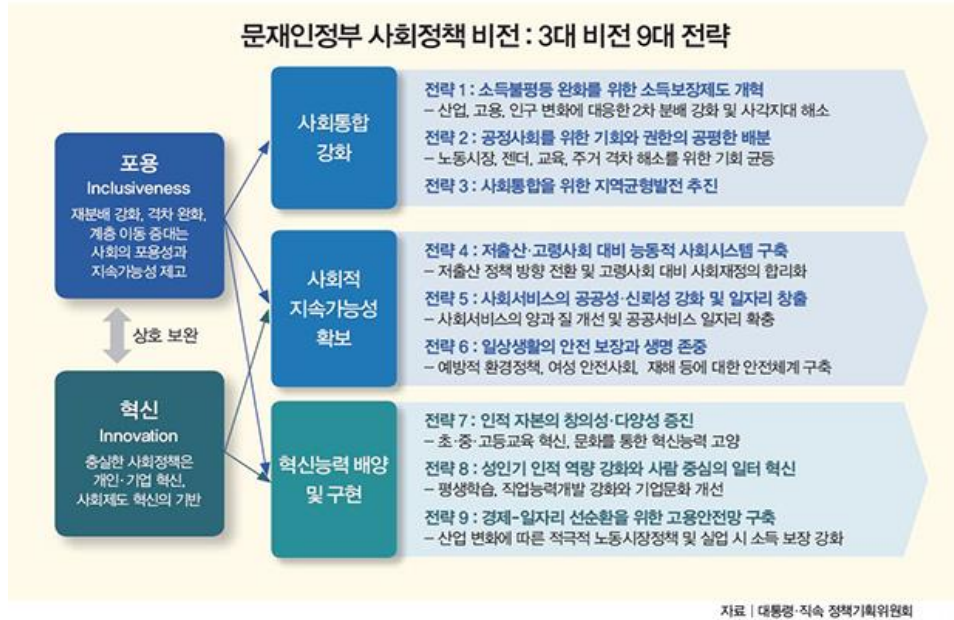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
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
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포용국가 전략 회의' 개최 (2018. 9. 6.)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는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 9대전략과 함께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
장 3개년 계획' 추진 계획을 밝힘.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
력 배양

'포용국가 전략 회의' 개최 (2018. 9. 6.)



참고 자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 6.

박주민 의원안, 천준호 의원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신영복 의원안, 문정복 의원안: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교통수단 범주 조정 등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2.

김예지 의원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포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6.

이상헌 의원안: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4.

정부 제출안: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등 마련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2. 1. 24.

이 글은 길게는 지난 40년의, 짧게는 지난 20년의 한국사회 변화를 장애인 운동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20년 후의 한국사회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 운동의 영향이 장애 입법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둘의 관계를 주요 국면으로 구분해 서술했다.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방안 - 해외 사례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보고서 2020-20-5 2020.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대다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생애주기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 사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본 해외 사례 연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제도 설계에 앞서, 다른 나라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성공 사례(핀란드, 독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아직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영국)도 탐구하였으며, 동시에 중앙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살펴보았다(미국 피츠버그).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방안 - 사회보장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보고서 2020-20-4 2020.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분야의 정책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여섯 개의 정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다섯째,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2)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공적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3) 사회서비스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4)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공영화 전략으로 사회서비스와 종합재가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2019. 3. 22.

- 발제 1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 발제 2 최저임금과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이(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3 불평등의 핵심: 노인빈곤의 전망과 과제(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46 2018. 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사회안전망 개편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 개편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주도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시스템(RTI) 기반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써 정책실험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포용과 혁신의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방안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2019. 9. 5.

[특별좌담회]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집중조명]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가론적 위상과 이행전략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혁신적 포용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 과제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복지, 제 길을 가고 있나?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복지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최유석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혁신적 포용국가의 교육이슈: 중요성과 개선방향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 2019. 8. 27.

포용국가의 국가론적 지위와 이행전략

세션1. 왜 혁신적 포용국가인가? : 필요성과 의의

세션2. 혁신적 포용국가, 어떻게 이를 것인가? : 운영원리와 이행전략

세션3. 라운드 테이블 :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심포지움 2019. 3. 19.

발표 1 혁신성장의 비전과 과제(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발표 2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산업혁신 방향과 과제(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라. 청년의 참정권 확대

개요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의 성장과 사회진출 생애주기와 밀착돼 있습니다. 고교·대학 진학에서부터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는 전(全)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쌓고(교육·학자금지원), 적성에 맞고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일자리 지원) 목돈을 마련하고(소득지원), 살 집을 마련하는(주거지원) 단계별 지원책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대책('18. 3.), 청년 주거지원 방안('18. 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19. 7.),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지원('20. 7. 제3차 추경) 등 각 분야의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년기본법」을 제정('20. 8. 5. 시행)해, 청년정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은 같은 맥락의 입법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11일 본회의에서는 현행법상 만 18세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등의 법안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1-12-31 (원안가결)
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1. 12. 31. 본회의 의결)으로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바,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	2022-01-11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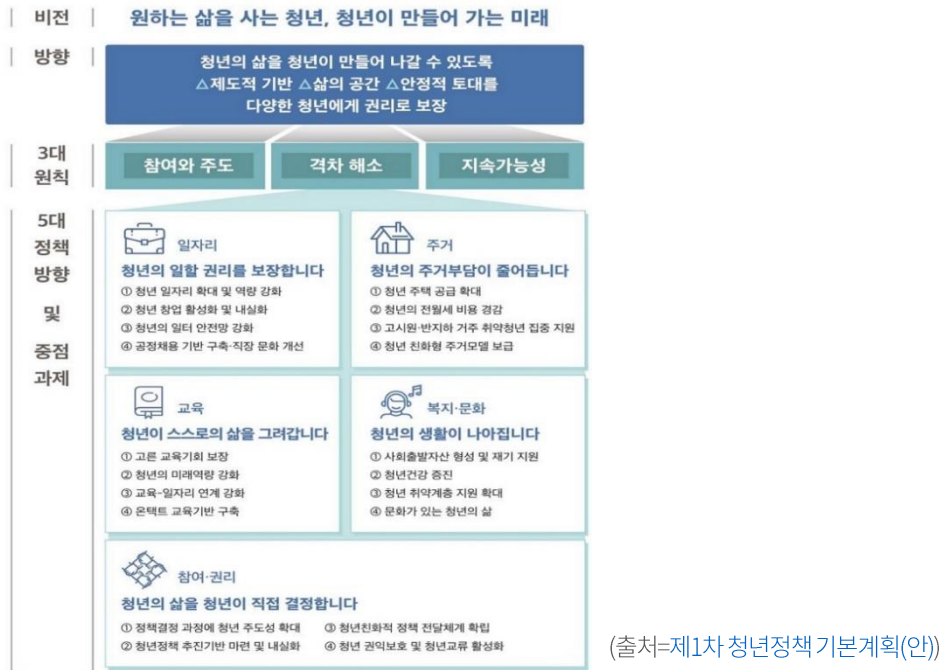
정책 동향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0. 12. 23.)

「청년기본법」(제8조)에서는 국무총리가 매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에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 12. 23.)에서 앞으로 5년간('21~'25)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 추진해 나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주요 내용

- (일자리)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21년도 55.5만 구직자 지원 및 청년창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주거) '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 호 등 27만 3천 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3만 호 포함)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 (교육) '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및 혁신공유대학 48개교 지정을 통해 미래사회 선도인재 10만 명 양성
- (복지·문화) 희망저축계좌 통합·신설로 '25년까지 청년 10만 명 자산형성 지원, 매달 한번은 문화가 함께 하도록 기반 확대
- (참여·권리) 정부위원회 청년참여대폭 확대 및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1. 3. 30.)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다. 32개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전 (준)지자체가 참여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총 1,500여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 '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분야	'21~'25년 5년간 목표 (기본계획)	'21년 목표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구직자 128만명+0 지원 * 코로나19 극복 55.5만명 지원	·청년구직자 101.8만명+0 지원 *코로나19 극복 66.5만명 지원(+11만명 추가)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 청년 중사 업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청년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주거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청년주택 5.4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3.5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3.1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40만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청년 8만명+0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마련 지원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강화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혁신공유대학 48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온택트 평생교육 체계 구축	·K-MOOC 청년 참여 인센티브 강화
복지 문화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원, 자산형성지원 통합 및 확대방안 수립(21.하반)
	·마음건강 바꾸쳐 지원	·마음건강 바꾸쳐(월20만원) 최초 시행
참여 권리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확대(20 13.9→'21 17.1%) - 청년위원회 추가 확대 방안 마련(21.7월)
	·온라인 청년하나로 구축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21.하반)
	·청년마당 조성	·청년마당 표준 운영계획 수립(21.하반)

□ '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 추진 과제

분야	'21년 주요 추진 과제
일자리	▶(서울특별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171,000명, 868억원)
	▶(광주광역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1,170명, 100억원)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600개 기업, 400억원)
	▶(전라남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054명, 50억원)
	▶(울산광역시) 청년 CEO 육성 사업 (40명지원, 30명 창업, 10억원)
주거	▶(경상남도)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20호, 20억원)
	▶(부산광역시) 청년 월세지원사업(3,000명, 30억원)
	▶(충청북도) 대학생 주거지원(서울·청주, 6.8억원)
	▶(인천광역시) 취·창업 재직청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400명, 5억원)
교육	▶(대구광역시)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455명, 125억원)
	▶(전라북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17개교, 6억)
	▶(강원도) 인재육성장학금 지원(4,340명, 13억)
복 지문 화	▶(대전광역시) 청년 희망통장 지원(500명, 32억원)
	▶(경상북도)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착금 지원(120명, 6억원)
	▶(충청남도) 청년 문화예술가 육성 (22명·53개단체, 18억원)
참 여권 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조성 (5,000명, 5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센터 운영 (2,400명, 12억원)
	▶(경상남도) 청년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제 (10억원)

(출처=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도자료)

참고 자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1. 12.

용혜인 의원안 등 :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 1.

장경태 의원안 등 :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한국 청년 정치의 미래를 위한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칼럼」 2019. 12. 16.

실제로 20대 국회의 2-30대 국회의원은 모든 정당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 ... 우리는 적어도 국회 내에서 5060세대는 지나치게 과다대표된 반면, 2030 청년세대는 그들의 응당한 몫에 비해 너무 과소대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인구절벽과 고령화, 일자리 감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그 도전의 중심에 서게 될 미래 세대의 대표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찾지 못하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국회에 한 돌 단발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현재의 우리 정치 구조는 분명 문제가 많다. 더군다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비교 대상으로 상정하는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의 청년 정치 대표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제의원연맹(IPYU)가 매년 발행하는 청년 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에서 우리는 0.66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참고로 덴마크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41.34%, 그리고 이번에 34세 총리를 배출한 핀란드가 36.0%, 싱가포르 21.74%, 그리고 일본(8.39%), 미국(6.67%), 중국(5.61%) 등으로 조사되었다 …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2021. 4. 30.

본 연구는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책 개선점을 분석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정책시사점은 첫째, 그간 정부 정책은 주로 청년 일자리와 취업 지원 정책에 집중되었고, 둘째, 청년층의 현실과 특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취약계층 청년 대책이 부족하며, 셋째, 정형화된 사업 운영방식, 정책대상이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위주로 편향된 점 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비전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기초 확립, 일자리 중심에서 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청년정책 영역 확대, 취약계층 정책개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을 「청년기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보고 20-R39 2020. 7.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관련 계획 및 정책방안, 청년실태 및 정책여건 등을 분석하여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역할과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도출하는데 있음.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안)의 초안을 마련해 제안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① 정책대상자인 청년 실태 및 청년을 둘러싼 환경 분석, ②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책 분석 및 정책사업 분석·평가, ③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 ④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구성(안) 제안, ⑤ 성과목표 및 측정지표(안) 개발을 내용으로 함. 청년 실태 분석 및 청년정책 분석·평가를 위해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이 활용되었음.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을 위해서 청년정책분야별 정책델파이를 실시하였으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구성(안)은 부처·지자체 정책 실무협의회 및 청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립하였음. 성과목표 및 측정지표(안) 개발은 2차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음.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 2016. 11. 30.

□ 청년세대의 실업문제가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사회문제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였고,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일자리 제공 등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됨.

○ 즉 고용 정책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가족형성 지원,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에 대한 사회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정책 추진 기반으로서 법안이나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도 중요하기 때문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규모를 추정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외의 청년정책 관련 입법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 공공정책팀 · 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